

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이낙연 대표의 192일, 그 성과와 기록들(참고자료)

- 21.3.7-

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민생정당	재해현장 방문: 돕겠다 했으면 끝까지 돕는 NY(민생고에 답하는 이낙연 스타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북 남원, 전남 구례, 경남 하동 수해복구현장 확인(20.9.19) -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현장 방문(20.9.22) - 경북 태풍 피해지역 현장 방문(울진, 영덕)(20.9.26) - (인제)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간담회(20.10.22) ※ 폭우 및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(20.9.28)
	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대재해처벌법(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처벌 등) - 전태일열사 묘역 참배(20.11.12)
	필수노동자 보호·지원 대책 마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주택관리법(경비원 등 근로자 입주민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), 민생경제TF(송파구 삼성래미안아파트, 21.2.16) -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(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) 개정 -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대책 1차 합의문 발표(21.1.21),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점검에 관한 합의 도출(21.1.29), 택배과로사방지캠페인(21.1.15) -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(20.12.27) - 추석대비 택배물류시설 현장 점검(20.9.24), 택배노동자현장간담회(20.10.27), 대리운전 노동자 현장 간담회(20.10.23), 이륜차배송노동자 현장 간담회(20.11.3), 한국노총대리운전개선보고대회(21.2.23) - 환경미화원조찬간담회(20.9.29), 시내·마을버스 현장방문(20.10.3) - 코로나19 돌봄 관련 현장방문(20.10.4),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(20.10.7, 청와대) - 필수노동자 관련 당정(20.11.12)
	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고3법(고용보험법, 산재보상보험법,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) - 근로복지기본법(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 지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)

	인권 보호 및 사회적 약자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동학대·살해죄' 를 신설 및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 강화(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),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 삭제(민법 개정),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 및 피해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확대한 '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' -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(식품위생법) -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함(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) - 아동학대예방의 날 현장방문(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)(20.11.19),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(21.1.6), 위기아동 실태조사 점검 및 자자체 의견 청취(20.11.6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초중등교육법/유아교육법(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교원 자격 금지) - 성폭력사건 가해자(조두순) 석방 관련 피해예방 관리대책 간담회(20.10.12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체육계 고질적인 문제해결(국민체육진흥법) - 장애인활동지원법(65세 이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공백문제 해소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미래주거추진단 발족(20.11.5) 및 활동 - 기존 부동산 정책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 시작, 주택의 공공성 확대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 마련 추진 - '희망, 안심, 책임' 의 3원칙 제시: 무주택자에게 희망을,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안심, 집으로 큰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움
	부동산 정책의 획기적 대안 마련 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(노동조합법·공무원 노조법·교원노조법) - ILO 핵심 비준안 통과(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', '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', '단결권 및 단체교섭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)
	노동기본권 국제수준으로 향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방화장실협약식(21.2.16),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식(만료ktx마일리지 할인쿠폰으로 환급, 21.2.3), 취약계층 통신비자동감면(20.12.30),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(21.2.24)
	국민의 편익 증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개방화장실협약식(21.2.16), 한국철도공사와 협약식(만료ktx마일리지 할인쿠폰으로 환급, 21.2.3), 취약계층 통신비자동감면(20.12.30), 반려동물 동행시설 안내서비스 협약식(21.2.24)
코로나와 의 전쟁 승리 견인	당면한 코로나 방역 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감염병예방법(방역지침준수 명령 위반 시설 운영중단, 폐쇄명령 가능, 감염병환자 및 현장 대응인력 등의 심리지원 실시 및 경비지원 등), 학교보건법(학생 및 교직원 등교 중지 명령 근거 마련 등) -국난극복방역본부토론회(20.11.17), 코로나19방역 점검회의(20.12.4), 코로나19 병상확보

코로나19 감염병 대응력 강화

기 극복		를 위한 민간협력 방안 간담회(20.12.14), K-방역 긴급점검 화상회의(20.12.15), 코로나19 병상확보협력을 위한 금융업계 화상 간담회(20.12.16), 전국 병원협회 간담회(20.12.24), 서부산의료원 방문(21.1.29)
	코로나 치료제·백신 및 진단키트 개발·생산 상황 점검	-한국생명과학연구원(대전 본원) 방문(20.9.28), 셀트리온 방문(20.10.18), 녹십자 방문(20.10.22), 오송 진단키트 공장 방문(에스디바이오센서(20.10.2)),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(20.12.5), 코로나치료제 간담회(21.1.12), 세포기반 코로나 치료제 토론회(20.10.21), 국난극복 K-뉴딜위원회 바이오헬스본부 결과발표회(21.2.24), 코로나백신치료제토론회(21.2.24), 코로나19 및 대상포진치료제 원재료재배단지 방문(21.2.28)
	방역수칙 모범적 준수 및 사전임상시험 참여 캠페인	- 전당대회기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, 자가격리 수칙 준수(20.8.18-20.8.31) - 당대표 재임기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, 자가격리 수칙 준수(20.11.21-20.11.28) - 확진자와 단순 접촉 후 자가 대기 4회 (2회는 선제적 검사 후 음성확정) 등 - 코로나19 치료제-백신 개발 위한 ‘사전임상시험참여 캠페인’ 당 차원 참여
	의료계 파업 봉합	- 대한의협-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(20.9.9)
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	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치 /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	- 역대 최대 규모의 21년 예산안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처리 - 20년 4차 추경 여야합의로 통과 (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논란 있었지만 ‘코로나 긴급 지원’ 으로 교통정리, 전국민 통신비 지급 관련 야당의 강한 반대, 추경의 조속 처리 위해 야당 주장 일부 수용 -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(아내연표 20조 추경)- 신규 창업자, 노점상, 저소득 대학생 지원대상에 포함(21.2.28)
	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안정	-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, 유통산업발전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(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의해 임대료감액청구가 가능), 조세특례제한법(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) - 임금채권보장법(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용자 신청을 가능케 함) -배달의민족-전국가맹점주협의회 상생협약식(21.2.15) -코리아세일페스타(20.11.12), 인천시당민생경제 연석회의(21.3.4), 강원도당 민생경제 연석회의(21.3.5)
	코로나 상황 민생 현장 점검 및 지원	- 망원시장 상인간담회(20.9.2), 통안시장 방문(20.9.18), 남대문시장 방문 및 간담회(20.9.29), 부평시장 현장방문(21.1.29), - 국가대전환 민생경제 정기국회 지원단 출범(20.9.8) - 코로나19 위기 공연예술 현장 방문(20.9.20), 체육시설종사자 현장간담회(21.1.28), 한국학원총연합회 간담회(21.1.27), 이태원상인 현장간담회(21.2.4), 소부장소상공인간담회(21.3.2)

	돌봄 위기/교육 정상화	학교 교육 정상화 및 학생들 부담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학교교육 현장 방문(관악구 은천추 방문 20.9.11) - 사립학교법, 고등교육법(제난으로 학사운영제한 시 등록금면제감액가능 근거 등) -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차례대로 등교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(21.3부터 책임 등교제 시행 성과)
		돌봄 부담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(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육아부담 경감) - k-뉴딜 위원회 보육TF(21.2.23- 의료·방역종사자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및 이용시간 확대)
코로나 양극화와의 전쟁	상생연대3법 추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코로나 이익공유제 모범사례현장, 방문(21.1.14), 플랫폼 기업 이익공유제 화상 간담회(21.1.22) -상생연대3법 발의(영업제한 손실보상제·협력이익공유제·사회연대기금)
	교육불평등 해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 방안제시(임용예비인력, 기간제 교사 배치 등), 원격 플랫폼에 대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다양한 교육 플랫폼 개발 필요성 제시 -교육특위 출범(21.3.4)
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(더 나은 미래로의 전환)	사회대전환의 비전 제시(국민생활기준2030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한국의 신복지체제 세미나(20.11.17) -교섭단체대표연설 통해 민주당의 비전인 국민생활기준2030제시 -아동수당확대, 만5세 의무교육, 유치원 무상급식, 온종일 초등학교 등 제안 -사회적 논의와 합의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설치
	선도형 경제전환	한국형 뉴딜 입법 및 현장방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당진에코파워 방문(20.10.23), 빛그린산단(광주) (20.10.30), 신재생에너지단지(부안군)(20.10.30) - 디지털집현전 구축 온라인 정책간담회(21.1.6), 미래입법과제 점검회의(20.12.3), K뉴딜당 정청 전략회의(20.11.16) - 새만금을 ‘스마트그린산단’ 국가시범단지로 추진((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,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) - 보안심사를 받으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(국가공간정보 기본법) -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(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) -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(고등교육법) - 스마트혁신기술에 규제를 신속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(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)
		바이오 산업 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바이오헬스 간담회(20.10.27), 셀트리온 방문(20.10.18), 녹십자 방문(20.10.22), 오송진단기트 공장 방문(에스디바이오센서)(20.10.2), 한국생명과학연구원(대전 본원) 방문(20.9.28)
		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, 향만법)

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	권력기관개혁의 제도적 완성		-공수처법개정안 통과 통한 공수처 설치, 김진욱 공수처장 접견(21.1.26) -경찰법(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 강화), 경찰공무원법(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부과) -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(20.11.3)
	공정경제3법,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		-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 제한(상법), 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을 요건 강화(독점규제법),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(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) 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(아이디어 탈취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), 상표법/디자인보호법(창작물(상표·디자인)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도록 함)
	과거사 정리를 통한 국민통합 추진		-5.18진상규명특별법, 5.18민주화운동특별법, 사회적참사특별법, 4.3특별법 -4.3 희생자 위령탑 참배(20.11.18), 제주4.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(20.12.18), 여순항쟁위령탑 참배(21.2.11), 4.3평화공원 방문 및 유족회간담회(21.2.28), 이용수 할머니 면담(21.3.5)
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	균형발전	지역균형발전뉴딜	-탄소중립특위 지방정부추진단 발대(21.2.5) -한전공대 부지 현장시찰(21.2.10), 시스템반도체(네페스라워)(충북 괴산)(20.11.11), E-모빌리티(디피코)(강원)(20.11.11), 제주테크노파크(20.11.18) ※지역균형발전 뉴딜은 당내 특위 출범 이후 정부도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에 추가
		국가균형발전	-국가균형발전특위 발대(21.2.1) 농어민단체장간담회(20.11.10),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(21.3.3), 농어민위원회 출범(21.3.3) - 호남초광역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착수보고회(21.2.24),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
		국회 세종의사당 시대 열기 위한 단계적 전략 발표	- 국회 교육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세종시 이전 → 국회 균형발전특위 구성 통한 국회 완전 세종시 이전 → 국회의사당 부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·창업 클러스터 조성
		가덕도신공항 및 동남권 신경제 엔진	-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(20.11.17), 동남권신공항추진단간담회(20.12.1), 가덕도신공항 현장시찰(21.1.21), 북항재개발사업현장브리핑(20.11.4) -동남권 신경제 엔진 정책간담회(21.2.9) -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, 가덕도신공항특위 출범
		새만금 그린뉴딜 추진	-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(새만금을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추진)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 출범식(20.11.19)
	현장최고위(지역균형발전뉴딜 추진 독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.10.30(광주, 전남, 전북), 20.11.4(대구, 경북, 부산, 울산, 경남), 20.11.11(충북, 강원), 20.11.18(제주), 20.11.25(수도권)
	자치분권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자치법 전면개정(32년만), 지방교육자치법,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법 -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발대(21.2.3), 참좋은지방정부 임명장 수여(20.10.27), 지방정부 우수조례 시상식(20.12.22)
미래지향적 전방위의회외교추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일외교 갈등 해결 노력 - 주한 외국대사 면담 - 미일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한반도TF 출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스가 총리 최측근 가와무라 간사장 면담(20.10.18) o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방일(20.11.12-14), 스가 총리 면담 o 주한외국대사 면담: 프랑스대사(6.19), 미국대사(20.10.20), 일본대사(20.10.22), 러시아대사(20.10.29), 중국대사(20.11.3), 영국대사(20.11.10), 베트남대사(20.12.15), 인도대사(20.12.17), 이스라엘대사(21.1.20), 호주대사(21.2.26) o 민주당 내 미일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한반도TF 출범 o 민주당 한반도TF 의원들 방미(20.11.15~),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면담 o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발간(민주연구원) o 한러수교 30주년 기념 국회 특별전시회(20.10.27), 제5회 장진호 전투영웅 추도행사(21.10.27)
더불어민주당 혁신을 통한 100년 정당의 초석 마련	디지털정당으로의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온라인 의원총회(20.10.10, 20.11.5, 20.11.12, 20.11.24,), 온택트 신년인사회(21.1.1) o 최고위원 화상 간담회(20.8.30, 20.9.13(?)) o 언택트 스마트 소통시대에 맞춘 정당최초 디지털매거진 발행
	당내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엄중한 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윤리감찰단 활동 통한 김홍걸, 이상직 당적 정리, 윤미향 의원 당원권 정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홍걸 의원 제명 - 당 윤리감찰단 조사 본격화되자 이상직 의원 자진 탈당 - 윤미향 의원 당직 이어 당원권 정지 o 여당 주도로 소속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의결 o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, 지방의원, 지자체장 등 다주택보유 및 기타 비리 조사 o 쉐더폭력신고상담센터 운영 및 당원 성인지교육 강화 o LH투기의혹에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,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 정밀 조사
	2020 더 혁신위원회 통한 중장기 정치혁신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윤리특위 상설화 제안 - 기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상위원회로 개편(전원외부위원, 독자적조사기능 부여)

		-인재위원회 설치, 민주아카데미 설립, 청년민주당 재창당(예산, 인사, 공간의 독립성 보장) 제안 -국가비전위원회 설치 및 정책전문위원 확대 제안(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 77명→ 300명) -시군구 지구당 신설, 참여·숙의 플랫폼 ‘민주마당’ 운영, 경선 후보 정보공개·공약발표·상호토론 의무화 제안
	온라인 방송국 텔리민주 개국	-온라인 방송국 ‘텔리민주’ 개국(21.1.8, 기존 ‘쌈TV’ 종합편성 채널로 확대개편)
	청년과의 소통강화	-청년TF위원회 미팅(20.11.5) -청년정책연구소 발대식 (21.2.20), 청년특보단 발대식(21.2.21), 전국청년당 출범(21.2.27) -청년TF활동보고 및 정책협약식(21.3.7)
	전국순회정책엑스포(민주연구원)	서울정책엑스포(21.1.27), 부산정책엑스포(21.1.21, 21.2.18) *향후 일정(4월 울산·경남(2회), 5월 대구·경북·강원(4회), 6월 대전·세종·충남·충북(3회), 7월 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(3회), 8월 인천·경기(3회) 등 지역별로 총 18회
	당세 취약지역 적극 지원	-더불어민주당 협력의원단 출범(더불어민주당 당세 취약지역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이 협력해 활동)
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	4.7재보궐 선거 승리 지원	-서울시장후보자선출경선대회(21.2.21) 및 서울시장 후보선출개표행사(21.3.1), 부산시장후보자선출경선대회(21.3.2) 및 부산시장 경선결과발표대회(21.3.6) -울산 재보선 필승결의대회(21.3.2) -국민참여형 플랫폼 ‘4.7재보선 특별페이지’ 오픈

<참고: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재임기간 본회의 안건 처리 현황>

구분	법률안	규칙안	예산안 등	결산 등	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	기타 (인사, 결의안, 동의안, 위원장보궐선거 등)	합계
건수	422	2	14	3	4	35	480

〈주요 법안 성과〉

□ 코로나 국난극복·민생입법

① K-방역망 강화를 위한 ‘감염병예방법’

-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, 폐쇄 명령 가능
- 감염병환자등과 가족, 감염병의심자, 의료인,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실시 및 경비 지원
-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-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

②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’

- 제1급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
-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의 해지·갱신 거절 또는 권리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함

③ 경제위기 대응·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‘대중소기업상생법’, ‘유통산업발전법’

-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 추가
-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위반한 대기업에 대한 과태료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
-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

④ 재난 시 학생지원을 위한 ‘사립학교법’, ‘고등교육법’

- 재난으로 인해 학생 지원이 필요할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
- 재난으로 학사운영이 제한된 경우 등록금을 면제·감액할 수 있음
- 재난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 등

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드릴 ‘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’

- 코로나19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커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

⑥ ‘공동근로복지기금’ 활성화 및 근로복지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‘근로복지기본법’

-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 지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

⑦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융자 신청을 가능케 한 ‘임금채권보장법’

- 체당금(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)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,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, 퇴직한 근로자가 ‘생계비융자’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

⑧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(공제율 : 50% → 70%)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사회·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
‘조세특례제한법’

- ‘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
-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,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
- 고용증대세제 한시 개편
-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

한국교육방송공사법	- EBS 업무에 원격교육시스템 설치·운영 및 관리 추가	
근로복지기본법	- 근로복지수혜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	
한국해양진흥공사법	- 해운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긴급한 경제·사회적 위기에 선제적 지원 강화	
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	-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제도와 우선심사·수시동반심사·조건부허가 제도 등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발과 허가를 촉진하는 한편, 긴급 생산·수입명령,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의료 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	코로나19 대응

□ 민생·안전 입법

- ① ‘산업재해’와 ‘시민재해’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,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‘종사자’와 ‘일반 시민’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**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’**
 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, 부상 및 질병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

사망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, 부상 및 질병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등

*진통을 거듭한 끝에 노동계와 경제계, 시민사회의 의견까지 반영·조정하여 여야 만장일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, 국회 본회의 처리

②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,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**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’**

-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·발전을 도모하는 한편, 택배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분류업무 명확화,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·사용 근거를 마련하고, 안정적인 계약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(6년간)보장 하며 휴식·쉼터조성 근거를 규정,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택배가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사자·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장치를 규율화

③ **(특고3법)**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**‘고용보험법’**,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사유를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게 한 **‘산재보상보험법’** 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**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’**

-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
-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제의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함
-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,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

④ (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) 전국민이 공분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‘아동학대·살해죄’를 신설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한 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’ 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‘민법 일부개정 법률안’

-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조사·수사 착수를 의무화 하고,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장소를 확대하며,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분리조사 및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현장조사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
- 전국민이 공분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‘아동학대·살해죄’를 신설하고, 아동을 학대한 자가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
-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

⑤ 디지털성범죄대책을 마련하고, 피해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확대한 ‘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’

-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고, 아동·청소년 상대의 성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아동·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‘신분비공개수사’ 및 ‘신분위장수사’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과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을 위한 대화를 지속·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, 아동·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·유인하는 경우의 법정형을 상향
-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·청소년의 주거지, 학교 및 유치원,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 포함하여 1킬로미터 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고,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선을 7년 이상으로 상향하며, 신상정보 등록·열람 대상자에 대해 현재 읍·면·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가 가능하게 함

⑥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ILO(국제노동기구)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

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‘노동조합법·공무원 노조법·교원노조법’

- 노조 조합원 자격 자율화 및 기업별 노사관계 보완 입법 마련,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규율, 단협 유효기간 상한연장(2년→3년)
-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확대 : 직급기준 삭제, 퇴직공무원 가입 허용,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가입 허용
- 퇴직교원 등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함

⑦ ‘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’ , ‘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’ , ‘단결권 및 단체교섭

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’ 의 ILO 핵심 비준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의 노동권을 명실공히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림

-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도록 규정
-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·가입 권리,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·활동 보장,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을 규정
-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(또는 사용자단체)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·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

⑧ 성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한 ‘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’

⑨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‘식품위생법’

-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이 발생할 시, 오염의 원인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하고,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높여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

- 장애인들의 숙원이었던 ‘장애인활동지원법’ 통과
 -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‘노인장기요양급여’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량이 감소되는 현행의 사례를 개정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

-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‘국민체육진흥법’
 - 故 최숙현 관련 법안. 체육지도자 2년마다 재교육 의무화 및 체육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

- 국민께 약속드렸던 ‘청원법’ 통과
 -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공개청원 도입·청원조사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였음

전자장치부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 규정 명확화 -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해 외출제한 명령 필요적 부과 -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	조두순 방지법
원자력안전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근거 신설 -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도입 	
산업재해보상보험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 허용 -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라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- 법률 용어와 법문 표현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 	
한국주택금융공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택연금 가입가격 상한을 공시가 9억 원으로 상향 등 고령층의 주거안정 및 소득안정 	
보험업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험회사의 경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 	

공동주택관리법	-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기능 신설	
여권법	- 긴급여권 도입, 병역관련 여권발급 개선(일정 요건 하 병역 의무자에게도 복수여권 발급)	
국립소방원의 설립 및 운영법	- 소방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 설립·운영 방안을 보완	
자연환경보전법	- "자연환경복원" 정의, 복원기준 절차 등 신설 - 생태계보전협력금 명칭변경(생태계보전부담금) 및 목적 외 사용 시 환수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	
폐기물관리법	- 폐기물처리업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관리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 의무화	
하수도법	-물관리일원화(18.5) 후속조치 사항 및 공공하수도 설치·운영 효율화 등을 포함한 법령정비 - 공공하수도 무단점용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 정비	
환경교육진흥법	-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, 환경교육도시 지정 및 지정근거 마련 - 환경교육 주체에 "어린이집" 추가	
건축법	- 건축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함 - 광역자치단체와 인구가 50만 이상인 기초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	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	- 도시재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- 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간소화 등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절차 등을 정비함	
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	-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	
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	-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고,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,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(3년)과 달리 5년으로 하는 특례를 규정. - 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.	
건설기술진흥법	- "기술용역"이라는 용어를 "엔지니어링"으로 변경하고,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규정함. -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함.	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	-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할청의 구제명령, 이행강제금 및 벌칙 등 제재수단을 도입함. -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.	

<p>한국광업공단법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률의 제명을 한국광업공단법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으로 하고,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며,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함. 	
<p>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재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. 	
<p>행정기본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·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, 행정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,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,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. 	
<p>직업교육훈련 촉진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부장관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-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 	
<p>소득세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.25퍼센트로 인하 -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주기가 단축되기 전의 제출기한인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. 	
<p>법인세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.25퍼센트로 인하 	
<p>고등교육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	
<p>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학 현장실습 관련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 -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기준 완화(現 20%→10%) 	
<p>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선정근거 마련 - 정상화정리계획(RRP) 제도 도입 - 금융위에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부여 	
<p>신용보증기금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증연계투자의 투자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 	
<p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 	

관광진흥법	- 세무서장에게 관광사업의 폐업을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기관의 장이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- 유원시설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유원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도모
과기출연기관법	- 출연(연) 기본사업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-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 신설
방송법	- 한국방송공사 정관변경 인가 규정 정비
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	- 국가에 의한 발굴 대상 확대 및 공공성 제고 등
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	- 센터 약칭 변경과 활동내용 구체화 및 기부금 모집·접수 근거 신설
농업협동조합법	- 농협 임원·대의원 선거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점 보완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	- 해양생태축 정의 재정립과 해양생태계 보전·관리 기본계획 수립·시행 주기 설정(매 5년)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	- 금융위원회 권한의 금감원장 위탁근거를 마련

□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입법

① 새만금을 ‘스마트그린산단’ 국가시범단지로 추진

- **(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특별법)**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, RE100(Renewable Energy:재생에너지 100% 활용 캠페인)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

- (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) 스마트그린 산단의 정의를 확립하고 산업의 근거를 마련
- ②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
- (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)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,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, 기존의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등,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
 - (항만법)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복귀하는 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
- ⑤ 규제샌드박스 5법 중 하나로 스마트혁신기술에 규제를 신속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‘스마트도시조성 및 산업진흥법 개정안’
-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,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
- ⑥ K-뉴딜 미래법안으로 보안심사를 받으면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라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‘국가공간정보 기본법’, 사업용 수소차에 대한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’,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‘고등교육법’
- 보안심사를 받은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
 -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내 음주 등 위해행위를 금지하며, 여객사업용 수소연료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 등을 마련
 -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,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·운영을 의무화하고,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산업입지 및 개발법	- 산업시설의 디지털화,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지정·조성할 수 있도록 함	K-뉴딜
대기환경보전법	-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의무 폐지 -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행정처분 주체 및 신고대상 행정청을 명확화 -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제재처분(과태료) 및 교체·환불·재매입 명령 근거 마련	K-뉴딜

□ 개혁 입법

① ‘공수처법’ 개정안 통과 통한 공수처출범

- 공수처법이 제정된 이후 1년 가까이 야당의 조직적 반대에 의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표류 →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변경

② (공정경제3법)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한 ‘상법’,

신규 지주회사 대상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강화한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’,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‘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’ 등의 ‘공정경제3법’

-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%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,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
-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을 요건을 강화하고,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
- ‘금융복합기업집단’ 을 정의하고,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, 금융소비자를 보호

- ③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 ‘경찰법,’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‘경찰공무원법’
-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·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
 -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
- ④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제반 활동을 재개정하고,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,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, ‘5.18진상규명특별법·5.18민주화운동특별법’, 제대로 된 조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한 ‘사회적참사특별법’
-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범위·임기·제척(기피)·정원·활동기간 연장 등을 재개정하고,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, 공소시효를 정지하며,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날조한 경우 처벌을 강화
 - 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10일(1년 6개월)까지 연장하고, 4·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
- ⑤ 제주 4·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‘추가 진상조사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‘추가 진상조사’를 실시하도록 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도록 한 ‘제주 4.3 특별법’
-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, 위원회에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

- ⑥ 창작물(상표·디자인)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를 받을 수 도록 한 ‘상표법, 디자인보호법’
- 상표권자와 디자인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권리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침해자로부터 합리적인 실시료(로얄티)를 받을 수 있도록 함

상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표권·디자인권·영업비밀 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한도로 산정하던 현행 방식에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 전체가 손해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함 - (상표법)현행법 체계에 따라 ‘실시’ 용어를 ‘사용’으로 수정함 	
디자인보호법		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		
독립유공자에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립묘지 외 독립유공자 묘지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-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 연락체계 구축 	
해양경찰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·감독권을 제한하는 한편, ‘긴급하고 중요한’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지휘·감독할 수 있도록 함 - 수사부서의 장을 해양경찰청 외부로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사부서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함 	
관세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관세사 자격증 및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	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
방위산업기술보호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	
국회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운영 상시화 및 출석인원 인터넷 게시 	상시국회 관련법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장 	검경수사권

	치 부칙명령 집행 간주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	
출입국관리법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출국금지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	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 보상 청구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	
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	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외국인 여성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집행의 금지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추가	
통신비밀보호법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자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등의 통지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일을 추가	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	조정 후속법안
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.	
전자정부법	-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라, 범죄수사를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시점의 기산점에 사법경찰관의 검찰 불송치 결정일을 추가하려는 것	
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	-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으나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,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이 직위해제된 경우 그 기간을 전환복무기간에 예외적으로 산입하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	
공직선거법	- 「형사소송법」 개정에 따라,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	
공무원재해보상법	- '사법경찰관리'를 정의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가 2021년 1월 1일부터 제197조로 이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.	

□ 균형발전/자치분권

① 32년 만에 ‘지방자치법’ 전면개정

-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.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례조항을 넣어 다양한 행정이 가능토록 하였음

②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자,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가덕도 신공항이 신속하고, 탄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한 ‘**가덕도 신공항건설특별법**’

- 가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,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,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	- 학생수 감소에 따라 2인의 부교육감 설치 기준 조정완화	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	- 지자체,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(RIS) 지원 및 법인 설립·운영 근거 마련 - 전담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	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	- 아시아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, 어린이문화원 운영 및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도록 함. -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.	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	- 의·약·법학 등 계열의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중 거주 및 졸업 요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고, 그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. - 지역 우수 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.	